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공개되나

광주지검, 조만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 개최키로 수사 진행과정·결과·기소 대상자·범위 등 주목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강화한 새로운 공보준칙을 마련하면서 감감이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 진행 과정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5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조만간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한다. 광주에서 최초로 사건 진행 과정 공개 여부를 결정할 이번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검찰관계자 2명과 학계·언론계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1일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사건 진행 공개를 위해 각 검찰청 산하에 공개심의위원을 두고 승인을 거치고 있다.

현재 검찰은 법무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준칙에 의해 수사 진행상황을 일체 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위원회의 주된 쟁점은 최근 수사 장기화로 광주지검의 최대 결실들이 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 진행 과정 공개 여부다.

만약 위원회에서 공개 불가 결정을 내리면 수사 진행 과정은 공표될 수 없고, 사건 관련자들의 기소 문제 등 향후 형사 절차도 비공개로 이뤄진다. 반면 위원회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그동안 수

사 진행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까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특례의혹 수사로 모 건설 A회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검찰 수사는 이들을 포함해 기소 대상자 범위 등에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은 B행정부시장과 C감사위원장은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법

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A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검찰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서 부당 개입 여부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A회장 등은 관련 혐의에 대해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들 외에 대대적인 수사와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증거물 등에서 혐의점이 있는 또 다른 관계자들의 추가 기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까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당시 업무를 총괄한 시 국장급 공무원 이모씨를 직권남용 관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8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2지구는 지난 2018년 11월 금호산업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광주시 특정 감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우선협상자가 모 건설로 바뀌었고, 중앙공원 1 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으나 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 지위를 포기하면서 D건설이 우선협상자 지리를 승계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10개월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광민 기자

“노태우 장남, 5·18 자료 제출”

오월어머니집, 진상규명도 협조 의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씨(54)가 5·18 진상규명조사에 협조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월어머니집에 따르면 노재현씨는 지난해 5월 오월어머니집을 방문해 5·18 피해 당사자인 정현에 이사장 등 관계자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정 이사장은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5·18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씨는 “집에서 그런 자료를 본 적은 없다”면서 “조만간 집을 정리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관련 자료가 나오면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해 8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직계가족 중에서는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이후 지난달 다시 광주를 찾아 오월어머니집과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또 당시 ‘5·18의 진범은 유언비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된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관련해 “개정판을 낼지 상의해보아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찬 기자

전남대 ‘간호교육인증’ 5년 획득

전남대학교가 또다시 간호교육인증 5년을 획득했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간호대학은 최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시행한 ‘2019년 도하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 간호학 학사 학위 프로그램’이 2015년에 이어 연속 5년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5년 6월 10일까지이다.

간호교육인증평가란 간호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간호학생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학과의 비전

및 운영체계,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교육성과 영역에서 간호학 프로그램의 교육역량을 심사 인증하는 제도로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주관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얻게 된다.

1912년 개설 이후 107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전남대 간호대학(간호학과)은 지금까지 4,800여명의 학부 졸업생을 비롯해 석사 490명, 박사 150명을 배출하며 국내 간호전문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조기철 기자



필리핀 보훈섬 해외봉사활동 배대식 (사)광주공동체 문상필 상임공동대표와 봉사원, 고교생 등 35명이 4일 오후 광주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필리핀 보훈섬 해외봉사활동 배대식’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오는 12일까지 5박 7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해외봉사는 필리핀 보훈섬 바클라온 및 카마야안 고등학교에서 의료, 방역, 이·미용, 학교 개·보수 등의 활동을 펼친다. /광주전남사건기자단

순천 한 고교 시험유출 제보자 색출 논란

시민모임 “개선책 마련해야”

순천의 한 고등학교가 1학년 한국사 기말고사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제보자 색출에 나서는 듯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순천 A고등학교는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한국사 시험 힌트를 특정 반에게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러한 신고를 받은 시민모임 측은 전남도교육청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원이 접수되자 전남교육청은 A고교

측에 자체 조사하도록 했고, A고교는 1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는 제보자를 알아내려는 듯한 질문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특정인을 타깃으로 하는 설문지 항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해당 학교가 실시한 설문지 항목을 보면 ‘특정 반에게 준 힌트의 정보에 대한 경로’의 질문이 적시됐다.

다음 문항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여러분의 문제 제기의 진실성을 의심 받게 된다 문구와 함께 정보를 들은 반과

학생의 이름을 적도록 했다.

이를 두고 시민모임은 “학교가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신고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은 부조리를 알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경계심만 갖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시험 의혹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이 신고했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피해를 겪으면 안 된다”며 “전남도교육청은 A고교의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A고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 평가 전반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동구 국민체육센터 재개관 편의시설 대폭 확대

광주 동구청은 산수동 국민체육센터 증축공사를 마무리하고 6일 재개관한다고 5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시비 24억7,000만 원을 투입해 체육센터 증축공사를 했다.

동구는 4층을 증축해 다목적 체육관과 문화교실을 만들었다.

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농구·탁구·검도 등 다양한 생활 체육 활동이 가능하다.

또 3층은 헬스장·샤워실을 확장했으며, 개인사물함·의자 등 편의시설도 대폭 늘렸다. /고광민 기자

북구, 광주 유일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 선정

광주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선도 자치단체’에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북구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했고, 민선 7기 들어 27개 모던 등에 ‘생활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주민 불편사항 2만3,295건을 발굴하고 이중 98.2%

를 정비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정으로 북구는 타 자치단체에 전파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적극행정일반·법제개선·면책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과 적극행정 관련 공모사업 우선 고려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나라 기자

“급한 걸 어떻게 해!”

도리깨
노리깨

○·노상방뇨를 말하는 업주에게 육설하고 협박한 50대가 경찰서행.

○·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노씨(52)는 전남 저녁 7시 45분께 서구 풍암동 한 술집 앞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허를 찔렀다. /김종찬 기자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앞면30m)

- ① 평수 1,000평, 매매가 6억
- ② 평수 1,080평, 매매가 시세 10억

↳ 급매가 6억원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 물건

- ① 장성을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 8천5백만
- ② 장성 야은리(계획관리)500평 → 매매가 4억7천만원
- ③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 6억5천만
- ④ 담양읍메타세쿼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 8억2천만
-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 5억9천만

010-6670-9800

상가매매 상무지구

- ① 치평동상가 6층 [80평]
(유형주점,카페,노래방적합)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콜롬버스영화관 바로 앞
- 감정이 4억5천만원
- 매매가 2억5천만원
- ② 치평동상가 7층 [60평]
- 즉시입주가, 시설비없음
- 전망최고
- 감정이2억8천만원
- 급매 ⇒ 1억5천만원

■ 추천 물건

- ① 광산구 첨단 쌍암동상가 10층 [24평]
- 매매가 8천만원
(임대원로 -보300, 월44만원)
- ② 용봉동 원룸 매매 (툼15개, 주택1)
- 매매가 6억9천만원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반·특수반]

- ① 기초 실전반 모집 (무료강의 병행)
① 기초이론+실전
- ② 중급 실전반
① 중급이론+실전
- ③ 고급 특수반 모집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④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화건분석스터디

⑤ 경매투자 연30%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서 연20% 가능

010-4667-9820